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 공간 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옥식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야생동물이라는 게 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서식지가 보존돼야 하는 거죠. 서식지를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보통은 보호해야 할 종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이 높다, 또 하나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종이 있을 때 등 지정 여건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 그러니까 여기에만 사는 종

보호의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할 때 판단 기준도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많은데 충남에 유독 없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는 보호 해야 할 종이 있는 곳을 보통 지정하죠.

홍성은 천수만이란 곳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리, 기러기 종류들도 많고요. 흔히 흑두루미라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데 그 친구들도 많이 올 때는 한 2, 3천 마리씩 오죠.

[생물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게 핵심인데 지금 생물 위기라고 해요. 인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물 위기와 기후 위기에요.

기후 위기는 이제 많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도 뒤따라가는데 생물 위기는 지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파급은 굉장히 커요. 팬데믹도 결국은 생물위기의 하나거든요. 현재 겪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물 위기는 당장에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할 상황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자 이제 보호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거죠. 정책이 먼저 앞서서 생물종들을 보존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한다는 거죠.

[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보호구역을) 30년 전에 지정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왜 했지도 모르고,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라, 지금 현장을 가보면 “여기가 왜 보호구역이지?”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 곳이 많아요. 다시 보호구역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또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곳이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자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지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이행할 때의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죠.

세 번째로는 보호구역으로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 중에도 보호구역의 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법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호구역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종류가 매우 많아요. 습지 보호지역도 있고 등등 보호구역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호구역들의 기능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나 하면 축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보호구역 정책은 공 하나에 그냥 수십 명이 다 몰려다니는 그런 꼴이라, 포지션이 없다고요. 각각의 보호 구역별로 너는 이걸 해, 너는 이걸 해 그러한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다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서 빨리 생물 위기에 대해 절실함을 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내가 갈 곳은 저기 백 보 밖에 있는데 아직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계속 해야죠.